

재활용의무이행 실적자료 부풀리기 및 변칙 수행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1992년부터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2000년 이후 자율계약제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3년 초에 10개의 품목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의 인가를 해주고 조합으로 하여금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게 하고 있다.

조합은 재활용조합원들의 재활용 수행실적을 관리 감독기관인 자원재생공사와 생산자 측에 제출 및 제시하고 그 실적에 의해 생산자 측(조합원)으로부터 소정의 분담금을 받아서 상당부분을 재활용 수행 측(재활용조합원)에게 지원금(보조금)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의무량 불이행으로 인한 부과금 부과를 면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이행 실적이 실제보다 상당히 부풀리거나 지원금(보조금) 수혜를 더 받기 위해 재활용 실적이 가장되어 작성되고 심지어 한번의 재활용 반입물량이 두 번 이상의 실적으로 처리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어 지원금(보조금)이 지급 및 수령되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EPR 제도의 발전과 재활용 향상을 염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반축을 사고 있다.

이는 EPR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예견되었던 것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 만큼 관련기관은 은폐하려 하지 말고 과감히 굵은 환부를 도려냄과 동시에 원인을 파헤쳐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하루 빨리 재활용 수행의 도덕성과 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올바른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EPR제도의 도입 1년 과정을 통하여 지면상



발행인 장준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피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EPR제도의 도입 및 입안과정에서 재활용 수집·운반계의 연로 및 참여를 차단하고 조합운영에 있어서 폐쇄된 운영형태, 생산자 위주의 독단적 운영, 재생·재활용업의 하청구조 형태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불투명한 조합운영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실적자료의 부풀리기 및 변칙 수행 등의 폐단은 결코 시정되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 위주의 독단적 운영과 재활용 업계를 하청구조로 여기는 조합이 아니라 재활용 업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고 지원하는 형태의 조합으로 개선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재활용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재활용업의 종사자들이 신명나게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여 제도의 개선 및 보완작업을 착수함으로써 차체에 문제시 되고 있는 조합들의 개혁도 함께 진척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4년 2월